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중”

세계적 식량위기 확산에 인도 등 곡물수출 금지 정부 뒤늦게 해외 농업 개발등 대책마련 나서

- 홍보부 -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장기화 추세를 띄면서 '바다건너 산불'인 줄만 알았던 식량 문제는 어느새 '발등의 불'로 옮겨 붙었다.

연간 1,500만톤, 필요 식량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는 경제 안정을 넘어서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그간 석유·천연가스 등 부족한 에너지자원의 해외시장 개척과 연구개발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우리의 식량안보 개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주요 곡물가격의 상승세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 운임포함가격(C&F : cost & freight)은 2004년 4월 톤당 209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 3월 현재 35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두박 가격 역시 2008년 3월 현재 톤당 511달러로 사상 최고

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의 급상승의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걸프만 기준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8년 2월에는 92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방위로 가격상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농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 해외 식량 투자와 청보리 재배 면적을 10배 이상 늘리는 등 국내 사료용 곡물 재배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출규제, 수입규제 완화... 식량자원주의 확산

지난 2월 26일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이 오는 3월부터 밀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밀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 앞서 올 1월 1일 중국 상무부는 밀과 옥수수·콩 등에 최고 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긴급 조치를 발

표했고, 러시아도 밀에 대해 높은 수출세를 매기고 있다. 인도 등은 아예 일부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곡물의 주요 생산 수출국에서는 자국의 곡물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규제, 자국의 생산 안정화, 수입규제 완화 등의 조치(소위 곡물 내셔널리즘, 곡물 민족주의, 식량 자원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식량위기의 불길은 이미 견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인도·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바이오 연료용 곡물 소비 급증으로 곡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수출국의 기상이변과 재배면적 감소, 식량을 무기삼아 영향력을 과시하는 일부 수출국들의 식량자원주의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곡물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국제 옥수수·콩 값도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국제 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세계 곡물 소비량이 20억9,690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10년간 곡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곡물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은 당분간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축산업 생산자 부담 급증

곡물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축산경영, 특히 배합사료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양돈업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후사료의 주 원료가 되는 옥수수의 순수입국이며, 사료비가 양돈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처럼 배합사료가격 안정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아 가격상승의 영향을 완충없이 그대

로 타격받을 수 밖에 없어 생산자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수요처의 확대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더불어 국제 유가 상승, 해상운임의 상승 등이 추가되고, 설사가상으로 국제 곡물 수출국들의 식량 민족주의 확산 등이 가격 상승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축산업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영향이 큰 양돈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폐업도 예상됨에 따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뒤늦게 고개 든 식량안보 논의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곡물가 상승과 관련, 현재 사료·비료 지원, 해외농업개발, 국내 중장기 대책 등 세 개 부문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보리 및 쌀 수요 감소로 늘어난 휴경지를 활용, 지난해 말 현재 14만5,000ha에 불과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2015년까지 24만ha로 66%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값은 저렴하지만 영양면에서 수입 사료와 대등한 청보리의 경우 재배 면적을 9,000ha에서 10만ha로 거의 10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식량안보는 국내 농지 확보, 해외 농업개발, 안정적인 수입 경로 확보(유통)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농업개발이 장기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임은 틀림없지만 곡물 수출입 자체가 중단되는 극단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국내 농지 확보와 생산성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식량안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 허덕, 국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곡물 내셔널리즘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양돈**